

이슈분석 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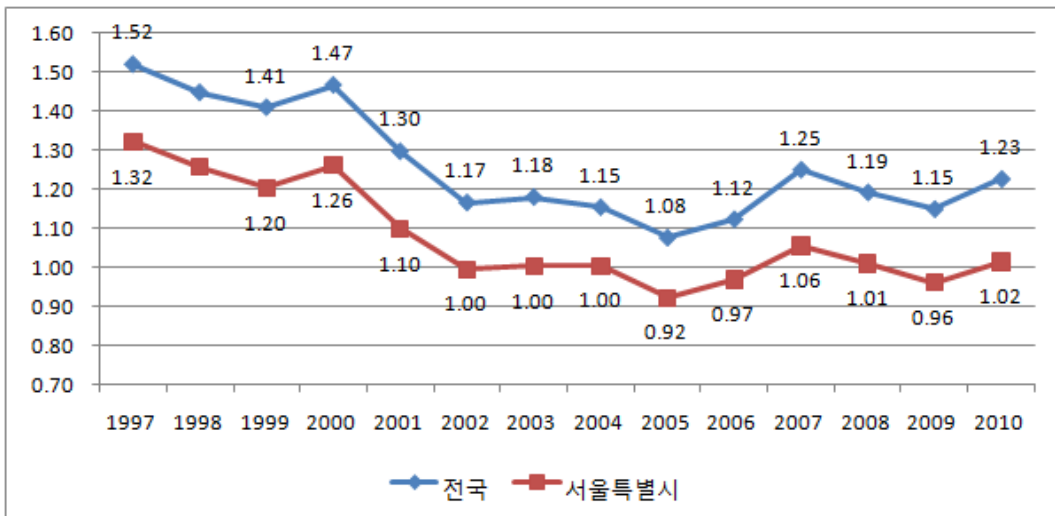
희망 자녀수와 실제 자녀수의 차이에 따른 차별출산 실태

김수연 (정책개발실 연구위원)

희망 자녀수와 실제 자녀수의 차이에 따른 차별출산 실태

▣ 서울시 출산의 문제 및 현황

○ 서울시의 2010년 합계출산율은 1.02명으로 부산(1.04명)¹⁾과 더불어 전국 최하위이며, 서울여성가족재단 조사 자료²⁾에 의하면 서울시 만25-44세 남녀가 희망하는 자녀수(Wanted fertility rate)는 평균 1.96명으로 희망 자녀수와 실제 자녀수 간에 0.94명 정도의 큰 차이가 발생.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그림 1] 전국과 서울의 합계출산율 추이(1997~2010)

- 1) 2010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의하면, 합계출산율은 전라남도가 1.53명으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충청남도 1.48명, 제주도 1.46명 순이며, 경기도 1.3명, 광주광역시 1.22명, 인천 1.21명, 대전 1.2명 대구 1.1명, 부산 1.04명이다.
- 2) 「저출산 관련요인 및 정책수요 분석을 통한 서울시 저출산 정책 발전방안 연구」(공선희, 2009)에서 서울시 만 25-44세 남녀 2,5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희망하는 자녀수는 평균 1.96명이었다.

-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ICPD, 1994)와 베이징세계여성대회(1995)는 행동강령에서 인권 차원에서 생식보건권(sexual & reproductive health rights)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개인과 부부가 출산 시기와 자녀 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 서울시민이 희망하는 자녀수보다 실제 출산하는 자녀수가 크게 낮다는 것은 그들의 생식보건권이 취약하다고 해석할 수 있음.
- 희망자녀수 이상을 출산한 기혼여성 집단과 희망자녀수보다 낮은 출산을 하는 집단에 대한 차별출산(differential fertility; 사회적·경제적 차이에 의한 인구집단별 출산 수준 비교 및 원인분석)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저출산 표적 집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 가구의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요인들이 부부가 기대한 만큼 자녀를 출산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자 함.

▣ 자료

- 본 이슈분석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 사용.
- 만 15~49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의 임신 및 출산행태, 가족 및 자녀가치관, 기혼부인의 취업 등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한 자료.
- 조사 대상 : 전국 기혼여성 3584명, 서울시 기혼여성 639명, 서울시 미혼여성 736명
- 서울시와 전국(서울 제외) 데이터 비교를 통해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자녀수는 기혼 여성의 실제 출산한 자녀수가 기대하는 자녀수와 같거나 많은 경우, 출산 자녀수가 희망자녀수보다 적은 가정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보았음.
 - 서울과 전국의 두 그룹의 경제적 측면, 생식보건 수준, 추가출산의지, 출산의 사회적 지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함

▣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2009)를 통해 본 이상적인 자녀수와 실제 자녀수의 차별 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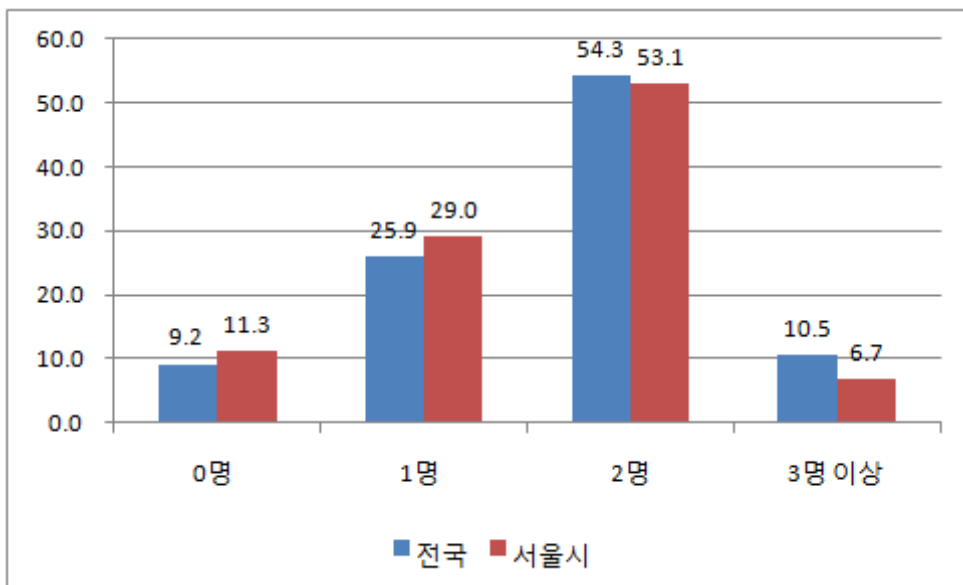
1. 이상적인(희망) 자녀수와 실제 자녀수의 실태

- 기혼 여성의 '희망하는 자녀수'
 - 전국 기혼 여성의 이상적인 자녀수는 평균 2.0명, 서울시 기혼 여성의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1.87명, 미혼 여성은 1.71명(전국은 1.85명)으로 전국>서울, 기혼>미혼의 형태를

띠고 있음.

○ 기혼 여성의 '실제 출산 자녀수'

기혼 여성의 실제 자녀수는 전국 평균 1.67명(n=3,584), 서울 평균은 1.55명(n=639)으로 서울이 낮게 나타났음. 서울은 전국에 비해 '자녀 없음', '1자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2명 이상'인 경우는 낮게 나타났음. 3자녀의 경우 전국 10.1%에 비해 6.7%로 낮았으며, 서울의 경우 4자녀 이상은 없음.



[그림 2] 전국과 서울시의 실제 자녀수 현황(%)

○ 실제 출산 자녀수와 희망 자녀수 비교

희망 자녀수에 비해 실제 출산 자녀수가 적은 경우는 전국이 37.9%, 서울이 35.5%였으며, 자녀수에서 비교하면 실제 2명의 자녀가 있어도 희망 자녀수는 그 이상인 경우가 전국은 21.6%, 서울은 13.2%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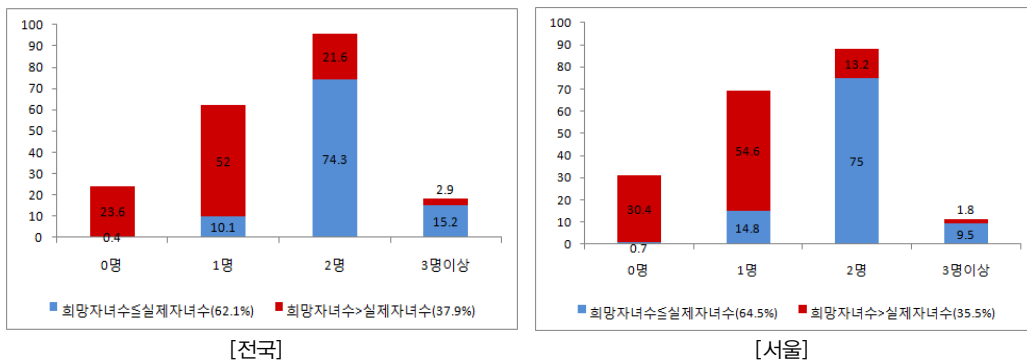
희망 자녀수와 실제 자녀수가 같거나 더 많은 경우는 전국 62.1%, 서울 64.5%로, 그 중에서 자녀 1명에 만족하는 비율은 서울 14.8%로 전국 10.1%에 비해 높았고, 3명 이상의 희망 자녀수를 충족한 비율은 서울 9.5%로 전국 15.2%에 비해 낮게 나타났음.

서울은 전국에 비해 희망 자녀수가 낮으며, 1명 이하의 실제 출산수가 희망 자녀수를 충족시키는 경우가 전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 소자녀관이 더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음.

[표 1] 전국과 서울시의 실제 자녀수와 희망자녀수 비교

(단위 : %)

		출산아수	0명	1명	2명	3명 이상	전체
전국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37.9)		23.6	52.0	21.6	2.9	100.0(1,357)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62.1)		0.4	10.1	74.3	15.2	100.0(2,227)
서울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35.5)		30.4	54.6	13.2	1.8	100.0(227)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64.5)		0.7	14.8	75.0	9.5	100.0(412)



[그림 3] 전국과 서울시의 실제 자녀수 현황(%)

2. 경제적 측면

□ 신혼집 대출 금액

- 조사 대상자의 75%가 신혼집 마련시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액 교차분석 결과, 희망자녀수 미충족 집단이 희망자녀수 충족 집단보다 2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빌린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음.

[표 2] 신혼집 대출 금액에 따른 가구의 자녀수

(단위 : %)

		대출무	대출금액				x 2
			2000만원 미만	2000~5000만원	5000만원 이상	전체(명)	
전국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77.4(934)	42.1	50.0	7.9	100.0(216)	12,506**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80.2(1586)	55.4	41.6	3.0	100.0(303)	
서울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74.3(206)	31.4	47.1	21.6	100.0(51)	5,958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75.7(380)	46.4	45.2	8.3	100.0(84)	

*p<.05, **p<.01, ***p<.001

□ 많이 지출하는 생활비 항목(1순위)

- 많이 지출하는 생활비 항목으로는 전국은 '희망자녀수 미충족 그룹(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인 경우 식료품비, 자녀교육비, 주거비 순으로 지출이 많은 반면, '희망자녀 수 충족 그룹(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인 경우 자녀교육비, 식료품비, 주거비 순으로 나타났고 자녀교육비의 지출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
- 서울은 희망자녀수와 실제자녀수의 차이에 관계없이 자녀교육비, 식료품비, 주거비 순으로 나타났으나, 비중에 있어서 '희망자녀수 충족 그룹'이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약 2배의 자녀교육비 지출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희망자녀수 미충족 그룹'의 경우 자녀교육비 비중이 낮고, 주거비(23.6%)와 보험료(11.6%)가 높게 나타났음.
- 희망자녀수의 욕구를 충족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자녀수 증가에 따른 자녀교육비 부담이 높으며, 희망자녀수에 못 미치는 가구의 경우 주거와 식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고, 보험료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주거 부담이 높으며, 노후를 대비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음.

[표 3] 자녀수 상황과 많이 지출하는 생활비 항목

(단위 : %)

		자녀 교육비	본인 /남편 교육비	식료 품비	보건 의료비	의복 및 가사용품 구입비	주거비	보험료	전체(명)	x 2
전국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31.3	1.3	32.6	2.6	3.9	21.1	7.2	100.0(1,098)	191.417***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57.6	0.5	20.3	1.6	2.2	12.3	5.5	100.0(1,773)	
서울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34.2	1.3	24.0	1.3	4.0	23.6	11.6	100.0(406)	80.093***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70.2	1.0	13.3	0.5	2.2	8.6	4.2	100.0(631)	

*p<.05, **p<.01, ***p<.001

2. 취업 및 종사상의 지위 관련

□ 기혼여성의 취업여부

- 기혼여성의 취업여부 교차분석 결과, 전국은 희망자녀수와 실제자녀수의 차이에 상관없이 '비취업중'인 경우가 '취업중'인 경우보다 많은 반면, 서울은 '희망자녀수 충족 그룹'인 경우 '비취업중'인 여성이 많았음.

[표 4] 자녀수와 기혼여성의 취업 비율

(단위 : %)

		취업중	비취업중	전체	χ^2
전국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41.5	58.5	100.0(1,130)	0.047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41.1	58.9	100.0(1,815)	
서울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51.5	48.5	100.0(227)	6.251*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41.3	58.7	100.0(412)	

*p<.05, **p<.01, ***p<.001

□ 남편 및 기혼여성의 종사상 지위

- 희망자녀수와 실제자녀수의 차이에 관계없이 남편의 종사상 지위는 전국과 서울 모두에서 상용근로자, 고용주/자영업자, 임시/일용근로자 순으로 나타남.
- 희망자녀수 이상을 충족한 경우 전국과 서울에서 ‘고용주/자영업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희망자녀수 미만인 경우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남편의 직위와 경제적 상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5] 가구의 자녀수와 남편의 종사상 지위

(단위 : %)

		고용주/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전체	χ^2
전국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21.7	68.8	9.5	100.0(999)	14.701**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28.4	63.6	8.0	100.0(1,628)	
서울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19.9	76.0	4.1	100.0(196)	13.313**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33.6	64.6	1.9	100.0(378)	

*p<.05, **p<.01, ***p<.001

- 희망자녀수와 실제자녀수의 차이에 관계없이 여성의 종사상 지위는 전국은 상용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고용주/자영업자의 순이었음.
- 전국의 경우 희망자녀수와 여성의 종사상의 지위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국과 서울의 기혼 여성들 중에서 희망자녀수를 충족한 여성의 경우 고용주/자영업자 비율이 희망자녀수 미충족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 희망자녀수와 남편의 종사상 지위와 관련하여 고용주/자영업자들이 희망자녀수 충족이 높다는 것은 특히 남자의 경우 고용주/자영업자의 소득과도 관련이 있으며, 여성의 경우는 소득도 큰 요인이지만, 다른 직종에 비해 고용주/자영업자의 근무시간의 유연함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봄.

[표 6] 가구의 자녀수와 기혼여성의 종사상 지위

(단위 : %)

		고용주/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전체(명)	x 2
전국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17.9	59.0	23.1	100.0(442)	13,285*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22.3	48.0	29.6	100.0(716)	
서울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14.0	66.7	19.3	100.0(114)	2,903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22.2	59.5	18.4	100.0(158)	

*p<.05, **p<.01, ***p<.001

□ 결혼 전후 1년간 취업 및 퇴직 여부

- 희망자녀수 충족 여부와 여성의 경력 단절과의 관계를 보기 위해 결혼 전후 1년간 취업 여부를 살펴보면, 전국과 서울 모두 응답 여성의 73%이상이 '취업중'이었음. 다만, 전국에서 희망자녀수를 충족한 집단에서 결혼 후 1년간 '취업 지속'이 66.3%로 조금 낮게 나타났다.
- 결혼 전후 1년간 퇴직여부를 보면, 전국과 서울 모두에서 희망자녀수 충족 그룹이 미충족 그룹에 비해 퇴직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7] 가구의 자녀수와 결혼전후 1년간 퇴직여부

(단위 : %)

		그만둔 적이 있음	그만둔 적이 없음	전체(명)	x 2
전국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23.2	76.8	100.0(323)	18,382***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37.7	62.3	100.0(453)	
서울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12.5	87.5	100.0(88)	5,918*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26.2	73.8	100.0(122)	

*p<.05, **p<.01, ***p<.001

□ 직장과 가정일 병행의 어려운 점

- 직장과 가정일의 병행과 희망자녀수 충족 여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국과 서울 모두 희망자녀수를 충족한 기혼여성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과 '일과 가정의 양립의 부분'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았음.
- 희망자녀수 미충족 그룹의 경우 전국은 부부간, 자녀간 대화나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서울은 일과 가사 병행의 부담이 가장 크다고 응답.

[표 8] 자녀수와 직장 과 가정일 병행의 어려운 점

(단위 : %)

		부부간, 자녀간 대화나 함께하는 시간 부족	일과 가사병행의 부담	직장일 전념의 어려움/직장에서 차별	문제점 없음	전체(명)	x 2
전국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41.0	36.3	8.5	14.2	100.0(402)	28,229***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47.0	42.5	4.1	6.3	100.0(630)	
서울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28.7	43.5	7.4	20.4	100.0(108)	15,321**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48.9	38.3	5.7	7.1	100.0(141)	

*p<.05, **p<.01, ***p<.001

3. 생식보건 수준과의 관련성 여부

□ 남편의 피임 여부

- 전국과 서울 모두에서 희망자녀수를 충족한 가정은 '남편이 피임을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데 반해, 희망자녀수 미만인 가정은 남편의 피임율이 낮음. 자녀가 많을수록 피임에 대한 관심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음.

[표 9] 가구의 자녀수와 남편의 피임

(단위 : %)

		예	아니오	전체(명)	x 2
전국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43.9	56.1	100.0(788)	73,314***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63.0	37.0	100.0(1,355)	
서울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54.4	45.6	100.0(147)	4,647**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64.9	35.1	100.0(308)	

*p<.05, **p<.01, ***p<.001

□ 피임중단 이후 최소 1년간 임신이 되지 않은지 여부

- 생식보건 수준과 희망자녀수 충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전국과 서울 모두 희망자녀수를 충족하지 못한 가정에서 피임중단 이후 최소 1년간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가 높게 나타남.
- 피임 중단 이후 최소 1년간 임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불임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불임이 추가출산의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

[표 10] 가구의 자녀수와 피임중단 이후 최소 1년간 임신이 되지 않은지 여부

(단위 : %)

		예	아니오	전체(명)	x 2
전국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28.4	71.6	100.0(429)	15,474***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17.5	82.5	100.0(485)	
서울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30.3	69.7	100.0(66)	2,466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19.8	80.2	100.0(106)	

*p<.05, **p<.01, ***p<.001

□ 불임진찰 여부

- 90% 이상의 가구가 불임진찰을 받지 않았으나, 전국과 서울 모두 희망자녀수를 충족하지 못한 가구 집단이 희망자녀수 충족 가구 집단보다 불임진찰을 받은 확률이 각각 7.2%, 8.1%로 높게 나타났다.
- 2005~2007년 3년간 체외·인공수정을 시도한 부부는 연평균 5만5,000여명으로, 2008년 신혼부부(32만7,700여쌍)의 15%에 해당된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불임의 문제는 저출산 문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희망자녀수 충족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함.

[표 11] 가구의 자녀수와 불임진찰 여부

(단위 : %)

		예	아니오	전체(명)	x 2
전국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7.6	92.4	100.0(873)	30,889***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2.6	97.4	100.0(1,419)	
서울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8.1	91.9	100.0(172)	7,214**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2.8	97.2	100.0(322)	

*p<.05, **p<.01, ***p<.001

4. 추가자녀 계획

□ 추가자녀 계획

- 향후 추가자녀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국과 서울에서 희망자녀수 충족 가구 집단은 90%이상이 '추가자녀 계획이 없다'고 응답. 희망자녀수 미충족 가구 집단에서 '추가자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50%이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까지 포함하면 약 55~60%로 희망자녀수를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계획하지 않거나 망설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2] 희망 자녀수 충족 여부와 추가자녀 계획

(단위 : %)

		예	아니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전체(명)	x 2
전국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36.4	51.9	11.7	100.0(836)	464,168***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3.8	90.4	5.8	100.0(1,366)	
서울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42.8	48.7	8.6	100.0(152)	150,387***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1.0	94.5	4.5	100.0(309)	

*p<.05, **p<.01, ***p<.001

□ 추가자녀 계획 수

- 추가자녀 계획이 있는 경우 추가자녀로 1명을 계획한 경우가 많았음. 둘째아 출산부터는 비용편익을 고려하게 되는데 자녀수 증가에 따른 기회비용과 양육비용 등의 경제적 고려와 자녀양육의 부담감이 첫째아 이후의 자녀 계획의 고려요소(김정석, 기혼여성의 출산아수별 추가출산계획, 2007)가 될 수 있다고 함.

[표 13] 희망 자녀수 충족 여부와 추가자녀 계획 수

(단위 : %)

		1명	2명	3명	전체(명)	x 2
전국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68.4	27.8	3.8	100.0(291)	5,945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84.3	15.7	0.0	100.0(51)	
서울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71.7	25.0	3.3	100.0(60)	1,164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100.0	-	-	100.0(3)	

*p<.05, **p<.01, ***p<.001

□ 추가자녀 계획이 있는 경우, 자녀출산 후 일을 지속 시에 자녀를 돌볼 사람

- 추가자녀 계획이 있으면서 일을 계속할 계획을 가진 경우 자녀를 돌볼 사람으로 친정부 모와 시부모가 57.3%로 절반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놀이방 등 보육시설, 본인 또는 남편, 파출부/가정부/베이비시터 순으로 나타남. 직장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 양육이 조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추가 출산시에도 조부모의 돌봄 여부가 추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임.

[표 14] 추가 자녀 계획이 있는 경우, 자녀를 돌볼 사람

내 용	비율(빈도)
친정부모/시부모	57,3
놀이방 등 보육시설	21,0
본인 또는 남편	11,5
파출부/가정부/베이비시터 등	6,4
기타가족/친인척	2,5
기타	1,3
전체	100,0(157)

□ 추가자녀 계획이 있는 경우, 육아 휴직 이용 계획 및 비이용 이유

○ 추가자녀 계획이 있는 경우 ‘육아 휴직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50.0%로 나타났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28.7%, ‘이용 의향이 없다’는 21.3%로 나타났음. 육아휴직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사용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돌봐줄 사람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25.0%이었고, 그 다음으로 직장내 불이익, 대체인력 미확보, 상사의 눈치 등 직장 문제라고 응답한 경우가 53.2%로 실질적으로 육아휴직 이용의 제한의 이유로 나타남.

[표 15] 육아 휴직 이용 계획 및 비이용 이유

내 용	비율(빈도)	
있다	50,0 (82)	
없다	21,3 (35)	
비이용 이유	사용할 필요성을 못느껴서(돌봐줄 사람이 있어서)	25,0
	직장 내에서 승진과 보직 등에서 불이익을 염려해서	18,8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아서 직장동료에게 피해를 줄까봐	18,8
	휴가를 이용할 마음은 있으나 상사(고용주)가 원치 않아서	15,6
	수입이 줄어들어서	12,5
	복직이 어려울까봐(해고당할까봐)	6,3
	일이 많아서	3,1
	전체	100,0 (32)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모르겠다	28,7 (47)	
전체	100,0 (164)	

□ 자녀계획에 있어 부모님 도움 기대 여부

○ 자녀계획에 있어 부모 도움 기대 여부는 전반적으로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전국은 전반적으로 친정부모, 시부모와

친정부모, 시부모 순으로 도움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서울은 희망자녀수 미충족 그룹인 경우 친정부모, 시부모, 친정부모와 시부모 순으로 도움기대 정도를 보였음. 전반적으로 시부모의 도움에 대한 기대는 낮게 나타남.

[표 16] 가구의 자녀수와 부모 도움 기대 여부

(단위 : %)

		시부모 도움	친정부모 도움	시부모, 친정부모 모두의 도움	어느 분도 도와주지 않을 것임	전체(명)	x 2
전국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11,2	19,5	14,5	54,8	100,0(303)	0,673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9,8	23,5	11,8	54,9	100,0(51)	
서울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16,9	36,9	9,2	36,9	100,0(65)	2,486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33,3	0,0	0,0	66,7	100,0(3)	

*p<.05, **p<.01, ***p<.001

□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 (1순위)

-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로는 '자녀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자녀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순으로 나타나 자녀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자녀를 계획하는 데 있어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표 17]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

내 용	비율(빈도)
자녀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26,0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23,9
자녀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식품, 의류, 의료비 등)	12,8
소득이 적어서	9,7
나이가 많아서	7,8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비정규직, 일용직 등)	2,8
자녀양육을 위한 적절한 주택 마련이 어려워서	2,5
아이가 많아서	2,2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녀들의 장래가 염려스러워서	2,2
본인의 건강문제(정신적, 신체적 장애 및 만성질환) 때문에	2,1
아이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2,0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 위해서	1,7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0,8
남들도 자녀수가 나와 비슷해서	0,6
자아성취를 하는 데 시간이 부족해서	0,5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0,4

내 용	비율(빈도)
출산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차별(불이익)	0.4
가정 내에서의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아서	0.3
실업상태여서	0.2
본인 또는 남편이 애를 싫어해서	0.2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워서	0.2
신체적, 정신적 장애 또는 만성질환을 겪는 가족의 수발 때문에	0.1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0.1
배우자의 건강문제(정신적, 신체적 장애 및 만성질환 포함) 때문에	0.0
기타	0.4
전체	100.0(2,484)

5. 가족정책 관련 사항

□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종류 (1순위)

- 전체 대상자의 53.9%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으로 자녀보육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앞에 살펴본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로 자녀양육비용을 가장 많이 꼽은 점을 고려할 때, 자녀보육지원이 자녀양육에 있어 가장 절실히 원하는 지원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임.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녀를 돌보아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줌. 안심하고 자녀를 보육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할 것임.

[표 18]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종류

내 용	비율(빈도)
자녀보육지원	53.9
아동의 방과후 학교지원	8.6
다자녀가정 주택특별공급 및 주택자금대출	5.4
다자녀가정소득공제(세금감면)	3.5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특별공급 및 구입전세자금지원	3.5
종일제운영 유치원 확대	3.4
다자녀가정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출산크레딧)	3.3
직장보육시설확충	2.6
국공립보육시설확충	2.4

내 용	비율(빈도)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복귀 지원	2.1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비지원	1.8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1.6
출산 시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보기를 위한 산모도우미 지원	1.5
육아휴직 (급여조정, 대체인력지원, 남성참여활성화 등)	1.2
근로형태 유연화 (시간제, 시차별 출퇴근 등)	1.2
불임부부 지원	1.1
산전후 휴가 (급여지원확대)	1.0
산전진찰비용지원	0.8
양성평등문화조성	0.5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도입, 장려)	0.3
유사산 휴가 (급여지원)	0.2
기타	0.2
전체	100.0(1,317)

□ 출산 및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여건 (1순위)

- 출산 및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여건으로 '사교육비 경감'이 23.0%로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시설 확충', '공교육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는 자녀 양육에 있어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를 대체해줄 수 있는 공교육의 강화 등의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9] 출산 및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여건

내 용	비율(빈도)
사교육비 경감	23.0
질높은 보육육아지원시설 확충	13.7
공교육강화	13.6
안전한 자녀양육환경조성	11.9
학벌위주 사회문화 타파	10.2
경기활성화 (고용안정)	10.0
양성평등구현	5.5
복지수준의 향상	4.2
지나치게 치열한 경쟁적 사회 지양	3.9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확립	2.1
한부모가족 편견해소	1.8
기타	0.1
전체	100.0(3,503)

□ 자녀 보육, 교육비 지원 인지 여부

- 출산 및 양육 관련하여 자녀보육 및 교육비 지원을 알고 있는 경우는 전반적으로 약 80%의 인지율을 보임.

[표 20] 가구의 자녀수와 자녀 보육, 교육비 지원 인지 여부

(단위 : %)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전체(명)	χ^2
전국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82.4	17.6	100.0(866)	5.635*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86.1	13.9	100.0(1,386)	
서울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78.3	21.7	100.0(166)	3.736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85.3	14.7	100.0(313)	

*p<.05, **p<.01, ***p<.001

□ 자녀 보육, 교육비 지원 이용 여부

- 위에서 자녀 보육 및 교육비 지원 인지율은 80%인 반면, 실제 이용은 전국은 20%대이고 서울은 10%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활용이나 실제 이용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렇게 낮은 이용은 실질적 혜택이 적기 때문이거나 이용에 제한(적용기준)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21] 가구의 자녀수와 자녀 보육, 교육비 지원 이용 여부

(단위 : %)

		있음	없음	전체(명)	χ^2
전국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20.1	79.9	100.0(685)	9.290**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26.2	73.8	100.0(1,383)	
서울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9.0	91.0	100.0(122)	0.014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8.7	91.3	100.0(312)	

*p<.05, **p<.01, ***p<.001

□ 방과후 교육비 지원 인지 여부

- 출산 및 양육 관련하여 방과후 교육비 지원 인지율은 전국과 서울 모두 '희망자녀수 충족' 그룹의 인지율은 70%로 '희망자녀수 미충족' 그룹보다 약 10%정도 높게 나타남.

[표 22] 가구의 자녀수와 방과후 교육비 지원 인지 여부

(단위 : %)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전체(명)	χ^2
전국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67.2	32.8	100.0(866)	25.482***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76.9	23.1	100.0(1,385)	
서울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60.0	40.0	100.0(165)	6.989**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71.9	28.1	100.0(313)	

*p<.05, **p<.01, ***p<.001

□ 시간제 육아 보육시설 확충 인지 및 이용 여부

- 출산 및 양육 관련하여 시간제 육아 보육시설 확충 인지율은 40%대로 낮음.
- 시간제 육아 보육시설 확충 이용률은 6% 미만으로 전국과 서울 모두 저조함. 이는 시간제 보육시설 이용의 접근성이 낮기 때문으로 보임.
- 장영인, 최영신(시간제보육의 필요성과 그 활성화 방안 모색, 2008)에 따르면 고용형태의 다양화, 양육기능이 취약한 가족의 증가, 여성의 사회활동 욕구증가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보육에 대한 욕구가 높지만 이에 대한 대안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함. 시간제 보육시설이 있더라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접근성의 미흡이 낮은 이용률을 보인 것으로 보임.

[표 23] 가구의 자녀수와 시간제 육아 보육시설 이용 여부

(단위 : %)

		있음	없음	전체(명)	χ^2
전국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4.7	95.3	100.0(682)	0.814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5.6	94.4	100.0(1383)	
서울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5.8	94.2	100.0(120)	1.584
	희망자녀수≤실제자녀수	3.2	96.8	100.0(312)	

*p<.05, **p<.01, ***p<.001

□ 차별출산 실태 파악의 정책적 함의

- 희망자녀수 충족 그룹과 미충족 그룹간의 차별 출산 실태
 - 이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의 희망자녀수는 1.87명, 미혼여성은 1.71명으로 전국에 비해 소자녀관이 더 정착되었음.
 - 희망자녀수 충족 그룹과 미충족 그룹과의 경제적 요인에서는 희망자녀수 미충족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소득과 주거비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녀 양육비의 부담과 함께 출산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임.

- 희망자녀수 충족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자영업자와 고용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희망 자녀수 충족그룹이 사회적 지위와 소득 수준도 높게 나타남.

○ 여성의 생식보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 마련

- 희망자녀수 충족 그룹과 미충족 그룹 간의 생식보건 수준을 비교해 보면, 희망자녀수 충족 그룹에서 남성의 피임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희망자녀수 충족한 그룹일수록 피임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높으며, 남성의 자녀 계획의 참여와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
- 희망자녀 미충족 그룹에서 피임 중단 이후 1년간 임신이 되지 않은 비율과 불임 진찰율이 희망자녀 충족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희망자녀수 미충족 그룹이 추가 출산을 원하는 경우에도 부부의 부실한 생식건강으로 출산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최근, 불임치료 시술에 있어서 20-30대 연령층이 전국 17만명(2008년 기준)으로 전체 89%에 달했고, 지난 4년간 30대 불임치료 환자는 무려 41%로 증가했다는 보도(조선일보, 2009.6.15)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부의 생식건강과 저출산 사이의 상관관계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 여성의 가임기 시기별 생식보건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 마련이 강화되어야 하며, 현재 불임 시술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불임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필요.

○ 추가 자녀 출산을 위한 다양한 양육 지원 서비스 필요성

- 기혼 직장여성들의 추가 자녀 출산에 있어서 자녀 돌봄은 조부모와 같은 개인 양육에 의지하고 있음.
- 직장내 육아휴직 등의 활용을 권장하고, 다양한 돌봄 요구를 반영한 보육시설, 지원을 통해 일가정 양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가족 친화 정책 활용성 제고

-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53.9%가 자녀 보육 지원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자녀 양육 부담에 따른 개인의 보육비 가중으로 인해 사회적인 대책 마련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음.
- 자녀 돌봄과 교육 관련, 직장과 사회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의 활용률이 낮은 것은 제도가 수혜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혜택 받는 조건상의 문제가 있으며, 이는 가족친화정책이 출산의 안전망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가족친화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수립보다는 기존 제도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인식 전환 및 보완을 통한 제도의 정착이 필요함.